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대미 인식*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박형준 (조선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논문요약

일반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보여 지는 북한의 대미 인식은 불신, 적대감, 비방, 혐오 등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 년 간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간 합의 사항들이 상호 합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사문화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북미 양측은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할 대상, 혐오스러운 존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 효과’로 인해 서로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신뢰’의 부재가 비핵화 협상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의 대미 인식이 갖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을 연구하지 않은 채 역사서술서 분석을 통한 대미 인식의 불변론에만 머물러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북한의 대미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주요 인식들인 적대감, 불신, 비방, 혐오 등을 시기 구분 없이 하나의 프레임(frame)으로 묶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 협상과정의 난제인 ‘불신’과 관련한 북한의 대미 인식을 노동신문을 통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즉 ‘불신’, ‘적대 의식’ 등과 같은 북한의 대미 인식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투영됨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주제어: 북한, 대미 인식, 불신, 신뢰, 비핵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5710). 이 논문은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와 새로운 평화패러다임의 모색』, 2019 한국평화연구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2019.10.18)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주신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멘텀(momentum)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관계개선 및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이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던 분위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분위기이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도 점점 찾기가 진척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양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그 진위 여부를 금금케 하고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를 대화 기회로 열어놓고 미국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간 불신 해소 및 적대 관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직결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북미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과거에 체결했던 협약들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¹⁾ 특히 어느 국가든 국가이익과 생존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렵다. 게다가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 년 간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이처럼 구조화된 적대 및 불신 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와 양보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양측의 합의 사항들이 합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사문화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절대 믿지

1) 이수석,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의 역할.” 『평화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p. 102.

못할 대상, 혐오스러운 존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 효과’로 인해 서로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신뢰’의 부재가 비핵화 협상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미국이라는 대상은 ‘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권 수립 후 현재까지 미국에 반대하는 담론을 재생산하며 대내 통합과 체제 유지의 기제로 삼고 있다.²⁾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만일 미국의 반동적인 간섭만 없었더라면 아주 쉽게, 아무런 복잡성 없이 조선인민의 요구대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임을 주장하는 등 미국을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분단의 지속 원인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목하고 철수를 주장하였다.³⁾ 냉전 시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은 한반도 분단과 함께 시작되어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미 간 주적 개념이 본격화되었고, 1960~70년대 DMZ에서 발생한 군사충돌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EC-121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 반미무력투쟁을 전개하면서 확대·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를 토대로 대미 적대 의식을 강화시켜 왔으며, 주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선전선동 했다. 그리고 이는 체제 결집 및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에 반해 탈냉전 시기 북한은 대외적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권 생존을 위한 체제 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몰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주적 개념이 존재했으며, 적대 의식에도 변화가

2) 김용현 역음, 『남북한 군사충돌로 본 분단 70년사』,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p. 325.

3)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pp. 204-211;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2003, p. 265.

4)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군사충돌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 총 보도 건수는 4,606건이었으며, 이중 미국의 군사도발을 보도한 건수는 3,294건이다. 그리고 미국이 무력 도발한 최초 사건의 수는 1,504건으로 집계됐다. 박형준,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노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집 3호, 2019, p. 290.

없었다. 즉 이와 같은 대미 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따른 전술상의 변화로 보아야하며, 근본적인 북미 간 숙적관계 및 장기갈등의 해소 등 북한의 대미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북한의 대미 인식 연구는 객관적 이해와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는 쟁점 주제이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규범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북한의 인식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각자의 자아중심적 인식에 기초한 정책들이 주조를 이루으로써, 북한의 대외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⁵⁾ 사실 북한의 대미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북한의 대미 인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력사과학』, 『역사제문제』, 『조선전사』,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등 역사서술서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북미관계의 현황이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사서술서의 특성상 대미 인식 불변론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북미정상회담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대미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 범위·대상이 과거 특정 시기 및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⁷⁾ 연구 범위에 있어서 분단 이후 갈등관계를 지속해온 북미관계의 변화과정을 한국전쟁 이전, 1차 북핵 위기 등 특정 시기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연구 대상 또한 북미 간에 발생한 역사적 주요 사건, 즉 한국전쟁 전후, 푸에블로호 사건, 제네바 합의 등 단편적인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

5) 김용호, “북한 핵에 대한 인식 이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제18집, 1993 참조.

6)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2003;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2003; 김세라, “북한의 ‘미 제국주의’ 역사 서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김복영·한관중, “남북한 역사 교과서 속의 미국 관련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07.

7) 김재용,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韓國史學報』 제37호, 2009; 서보혁,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작동방식과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2003; 박영호, “북-미관계의 갈등구조와 신뢰구축의 가능성.” 『신뢰연구』 제12권 2호, 2003; 최윤희, “북한의 대미 인식과 핵 정책: 북한의 대(對)오바마 행정부 초기 인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장원만, “북한의 대미인식과 갈등행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 석사학위논문, 2010.

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대미 인식의 기원, 형성 과정 등에 집중하고 있다.⁸⁾

이처럼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의 대미 인식이 갖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을 연구하지 않은 채 단순한 학술적 분석(전술적 전환)과 평가(대미 인식의 불변론)에만 머물러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북한의 대미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대미 인식의 관점들인 적대감, 불신, 비방, 혐오 등을 시기 구분 없이 하나의 프레임(frame)으로 묶는 한계가 있다. 즉 냉전 시기에는 대미 적대감 속에 ‘적대 의식’이 주를 이루었고, 탈냉전 시기에는 기존 대미 적대감과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강한 ‘불신’이 작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위협인식의 차이, 불신의 크기 등에 따라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미 인식이라는 큰 틀에서 통칭하여 사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미 인식을 노동신문 분석을 통해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로동신문」⁹⁾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기관지로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이며, 통치기제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대미 적대적 인식을 확산·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 협상과정의 난제인 ‘불신’과 관련한 북한의 대미 인식을 로동신문을 통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즉 ‘불신’, ‘적대 의식’ 등과 같은 북한의 대미 인식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투영됨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북한의 대미 인식 패턴을 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안문석,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2016; 송경민, “김일성의 대미 관 변화에 관한 연구: VICS 기법을 활용한 운영코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6; 김정학, “북한의 대미 불신의 기원과 내면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한국전쟁, 제네바합의 붕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9) 「로동신문」은 북한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국내외를 통틀어 축적된 자료 역시 상당하다. 이처럼 자료와 기간의 방대함이 갖고 있는 가치는 북미 간 역사적 사건 추이를 살펴보는 데 매우 용이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협상, 불신과 신뢰

일반적으로 국가 관계에서 불신과 신뢰는 양립하며, 그 특징은 불안정하며, 신뢰가 없을 경우 불신은 더 커진다.¹⁰⁾ 신뢰는 기대에 만족하는 결과를 산출해 냈을 때, 불신은 가치가 불일치 할 경우 만들어진다. 특히 국가 간 협상 과정 대부분에서 불신 또는 신뢰 상황이 존재한다. 즉 협상은 갈등 상황의 조정을 통해 양측의 공통된 관심 사항에 대한 완화 내지 해소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상은 잠재적인 협력과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대관계로부터 매우 정상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신뢰구축을 필요로 한다.¹¹⁾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¹²⁾

한편 협상은 협상과정에서 보여 지는 협상 방식에 따라 유화적 타협과 강제적 타협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유화적 타협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reward)을 제공한다. 보상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³⁾ 따라서 유화적 타협을 모색하는 경우 기대하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상대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불신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불신과 신뢰는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불신(distrust)의 개념적 정의는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된

10) Lewicki, R. J., & B. B. Bunker, "Trust in relationship: A model of development and decline." In Bunker, B. B., Rubin, J. Z., & Associates edis., *Conflict, cooperation, and justice: Essay inspired by the work of Morton Deutsch*. San Francisco: Jossey-Bass, 1995; 송옥란, "청소년의 신뢰와 불신 의식." 인하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p. 8-11.

11) 스킵트 스나이더 지음, 안진환·이재봉 옮김, 『벼랑 끝 협상: 북한의 외교전쟁』, 서울: 청년정신, 2003, pp. 122-123.

12) 박광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7집 1호, 2019, p. 31.

13) Dean G. Pruitt, *Negotiation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 148-150; 신진, "통합적 협상으로서의 미-북 정상회담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대한정치학회보』 26집 3호, 2018, p. 136.

다. 즉 부정적인 기대이며, 그 수준은 두려움, 회의주의, 냉소주의, 감시, 감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¹⁴⁾ 또한 불신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거나,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대할 때 주로 만들어진다. 또한 불신은 우리 사회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개인, 집단, 국가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되며, 특히 국가 간 불신은 상대방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관계가 깨질 경우, 분노, 배신감 등을 느끼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오랜 기간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이와 반대하는 개념을 지닌 신뢰(trust)는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모든 관계 맺기의 기본이 된다. 신뢰는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양한 개념에서 융합된 형태이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판단 및 선택하게 되고, 신뢰관계에 놓은 대상들 간의 정서적 결속을 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기대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협소한 신뢰는 배타적인 특징으로 사회 전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 불신을 형성시키기도 한다.¹⁵⁾ 신뢰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확실한 긍정적인 기대이며, 그 수준은 희망, 신념, 확신, 자발성 등에 의해 구분된다. 그리고 그 전제는 ‘투명성’하에 있다. 투명성은 상대방의 의심과 오해를 감소시키며, 거짓되고 숨김없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신뢰의 결여는 사회·정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단순하게 북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오해, 갈등만을 제거함으로써 완전

14) Lewicki, R. J., & D. J. McAllister, R. J. Bies,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3, 1998, p. 468.

15) Newton, K.,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Maraffi, M. & K. Newton, J. van Deth, Paul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1999, p. 3-5.

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70여 년 간 이어져온 상호 적대감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관계는 상호 불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 쌓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신뢰구축 조치가 비핵화 협상 논의에 선행해야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Ⅲ. 북한의 대미 인식

일반적으로 ‘인식(perception)’이란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현상과 문제를 보는 시각이며 ‘관(觀)’이란 점에서, 북한의 ‘대미 인식’은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실제적 태도와 정향(定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한편 세계 각국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안보불안(insecurity)을 느끼게 되는데, 대체로 강대국과 약소국,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안, 불신, 의혹과 우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미국과 같이 상호 적대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경우 상대방과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왜곡된 논리와 상호 비방, 만연되어 있는 불신으로 적대감을 조장한다.

1. 북한의 대미 인식 기원 및 공고화

북한의 대미 인식의 형성 및 강화는 분단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적 대립, 한국전쟁,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지만, 특히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의 전쟁은 상호 간 물질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군사적 무력충돌로 당사국들 사이에 ‘적(敵)’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16)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2003, pp. 9-10.

내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한 대량 파괴와 살상 등 전쟁 중에 미군이 보인 ‘야수적 만행’과 미국의 ‘핵폭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¹⁷⁾

해방 당시만 해도 북한의 대미관은 미국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¹⁸⁾ 1945년 9월 25일 개최된 조선공산당 제4차 평남지구 확대위원회 “미영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의 벗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아울러 그들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했으며, 남한의 조선공산당은 “연합국의 승리로 조선에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게다가 38선 분할 정책도 일제잔재 척결을 위한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등 미국을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미소 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고, 남한 내에서 공산당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그 동안의 우호적 대미관이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¹⁹⁾ 그리고 이듬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분단이 가까워지자 반미주의 쪽으로 확실한 노선을 정하게 된다.²⁰⁾ 즉 1948년 적대적 대미 인식의 등장 이후, 적대적 대미관을 공식화 했다.²¹⁾

“미제식민지락탈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조선인민은

17)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 27.
 18) 이에 대해서는 김재웅,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韓國史學報』 제37호, 2009 참조.
 19) “미국 파시스트.” 『로동신문』 1947년 4월 9일; “미국의 침략정책은 반드시 파탄될 것이다.” 『로동신문』 1949년 11월 3일.
 20) “반공연막뒤에 날뛰는 미제국주의.” 『로동신문』 1947년 11월 1일.
 2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인 『정로(正路)』에서 제국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5년 11월 1일 창간사의 ‘日本帝國主義’라는 표현임. 이후 제국주의의 호칭을 받은 국가는 미국이었음. 해방 직후 북한은 이러한 ‘미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곧바로 등장시키지 않았는데, 당시 북한의 대미관은 소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반파시즘 연합에 속했던 소련이 소·미·영 친선정책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당시 미국은 자본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전쟁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남북분단이 가시화되자 북한은 소련의 영향으로 억눌러야 했던 적대적 대미관을 공식화하기 시작함. 김세라, “북한의 ‘미 제국주의’역사 서술 분석” 참조. “미제국주의 침략기도를 재동북동포들이분격!” 『로동신문』 1948년 6월 5일; “미제국주의자는 남조선주둔군의증원을기도.” 『로동신문』 1948년 6월 12일;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단독정부수립괴뢰국을 전조선인민은절대배격.” 『로동신문』 1948년 6월 15일.

우리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미제무장간섭자들을 반대... 침략자들은 평화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의 위력이 얼마나 강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²²⁾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의 우두머리’, ‘남조선 식민지 파쇼정권의 조정자’로 인식해왔으며, 한국전쟁을 ‘남조선 해방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군을 조선반도 남반부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²³⁾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마소 대립이 만들어낸 동서냉전구조와 전쟁 경험에서 기인한 미국에 대한 적대 인식, 그리고 60~70년대 DMZ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반미투쟁의식을 재생산 및 강화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신천대학살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EC-121 격추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 불신과 대결을 심화시킨 반미투쟁 사건들을 북한 내 체제결집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통치기제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에 대한 대미 적대감을 공고화시켜 나갔다.

한편 북한의 대미 적대 양상은 탈 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소련 및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로 재편되면서 체제생존과 직결된 대미 위협인식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 불량국가 지목, 한반도 내 미국의 군사훈련 및 전략무기 배치 등 상호 군사안보이익의 추구 속에서 미국의 군사공격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오히려 체제의 안전보장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피포위 의식(sieged-mentality)이 극에 달했고,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여긴

22) 김일성,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 51-53.

23) “〈구호〉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일층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라! 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다 구국투쟁에 총력기하라!” 『로동신문』 1949년 8월 24일;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 예속화하고 있다.” 『로동신문』 1949년 10월 8일.

북한은 대미 적대 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원조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쪽으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데, 이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상의 변화로 미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²⁴⁾

이처럼 탈냉전시기 북한의 체제생존과 직결된 위기 상황은 북미 간 협상의 기회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북한의 대미 의식 체계에 있어서도 냉전시대 적대감이 주를 이루었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적대에 기반 한 ‘불신’이 북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2. 북한의 대미 인식 특징

북미 관계는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 이후 지금까지 상호 적대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 인식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다. 즉 ‘제국주의세력의 우두머리’, ‘남조선 식민지 파쇼정권의 조정자’로 인식됨에 따라 반제국주의, 경계심 및 혐오감이 북한의 대미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는 남한지역의 지배를 통해 한반도 정치·안보·군사·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신식민주의정책’으로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²⁵⁾

북한의 대미정책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다수의 현실적 또는 실질적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북한 대미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을 대내 통치기제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대감을 이용한 대미 적대적 인식의 내재화를 통해 북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 현

24)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p. 290.

25) “트루-맨주의는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는 기도.” 『로동신문』 1947년 9월 24일; “예속과 죽음을 강요하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라.” 『로동신문』 1958년 1월 29일.

재까지 적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때 형성된 적대 이미지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제 자주노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던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미국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박탈한 '철천지원수'²⁶⁾라고 하면서 대미 투쟁을 위하여 인민들은 힘을 뭉쳐야 한다고 선동하였으며,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켰다.²⁷⁾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본성으로 하여 조선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 갚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웠으며 오늘까지도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 있다.”²⁸⁾

이처럼 북한은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들이 투철한 반미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²⁹⁾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은 남조선 내 미군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 내 무력도발, 국제사회의 반미주의(성명, 국제상황 등)를 지속적으로 표출했다. 이처럼 북한은 냉전시기 대미 적대 인식의 확산을 통해 '3대 혁명역량'노선을 강화 및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통치 기제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미국을 불신(distrust)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핵 문제의 해결도 북한과 미국이 불신이라는 구조적 틀에 묶여 진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³⁰⁾ 사실 불신은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6)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 『로동신문』 1967년 6월 24일; 〈‘철천지원수 미제를 단죄한다’ 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에 광분해온 미제의 죄상.』 『로동신문』 1968년 3월 7일.

27) 윤용희, “북한-미국 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3집 2호, 1993, pp. 126-127.

2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미제의 조선침략일지』,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2015, p. 5.

2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의 책, p. 1.

30) 안문석,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2016, p. 86.

불신은 상대적이며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가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불신은 일방적인데서 그치지 않고 쌍방적인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70년대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및 UN군 사령부 해체 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1974년 미국에 양자 회담을 제의한다. 그러나 미국은 데탕트(detente) 분위기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제3국 회담 제안, 중국에 대한 요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의도로 인식하면서 거부했다. 한편 1979년 미국은 남·북·미 3자 회담을 제안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남한의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 전두환 정권과의 협상에 대한 불가 입장을 들어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냉전시기 북한이 제안했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진정성을 다시 제고하게 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불신이 쌓여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불신은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비핵화 협상은 주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 단계 해나갈 때마다 한·미가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이행'의 악순환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불신이 북미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적대감, 불신, 혐오, 반제, 철천지원수 등 북한의 대미 인식 특징들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차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력의 범주를 축소시켰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미국의 배신과 속임수에 대비하기 위해 협상 과정이 경직되고 위축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³¹⁾ 이로 인해 북한은 미국

의 제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V. 비핵화 협상과정에서의 대미 불신의 과거와 현재

협력 달성은 이익추구 행위자의 존재와 이익 발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행동 대상의 존재 등 세 가지 구성요건을 전제한다.³²⁾ 탈 냉전기 북한이 불리한 환경과 약화된 국가능력을 고려해 체제생존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경제위기 해소 및 체제보장을 담보하고자 했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북한에게 협상 상대로 인식되었지만, 미국의 적대적 행동은 북한의 대미 불신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1. 대미 불신의 과거: 합의 불이행과 불신의 공고화

(1) 제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불이행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 및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의 재편성을 의미하였고,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탈냉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소련이 사라졌지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반제자주이념에 입각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했다. 여전히 대미 적대감과 불신의 대결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

31) Lindblom, Charles,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p. 227; O.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51-52;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 106.

32)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World Politics*, April 1992, pp. 466-468.

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었다. 당시 미국은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북한과 같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은 대외적 고립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제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의 비핵화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로 볼 수 있다.³³⁾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양측은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미국은 IAEA를 통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이에 북한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³⁴⁾ 이후 미국의 전략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전환되면서 1993년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 IAEA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등을 결정하자 북미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고 핵시험전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평화,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의한 새 전쟁 도발 책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⁵⁾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NPT 탈퇴를 선포하는 등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응해 나갔다.³⁶⁾ 이후 전쟁 국

33)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7, p. 71.

34) 북한은 IAEA 에 플루토늄 90g 추출을 신고한 반면, IAEA 는 핵폐기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1kg 이 넘는다고 주장.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2월 이사회 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찰이 철회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제3국(미국)의 <정보자료>를 사찰에 이용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미신고시설에 대해 사찰은 IAEA 권한 밖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IAEA 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한 나라 <정보자료>가 사찰에 리용되어서는 안된다.” 『로동신문』 1993년 2월 24일.

3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3년 3월 9일.

36)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조치를 선포한다.” 『로동신문』 1993년 3월

면으로 갔던 상황이 해결된 것은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중유 및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 개선, 핵무기 불사용,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시행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비준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클린턴 행정부는 합의 사항 이행에 차질을 빚는 한편 제네바 합의를 통한 관계개선 분위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과 합의했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경유지원도 지연시켰다.

이처럼 미국이 1998년까지 경수로 건설비용 및 중유공급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고, 북미 간 갈등이 재연되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록 중간선거의 공화당 승리라는 미국 내 정치변동이 클린턴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북한은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와 관련된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미국이 합의된 약속의 틀을 깨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³⁷⁾ 이처럼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북미 간 관계개선과 신뢰 회복의 여지가 충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합의이행이 지연 되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불신과 대결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 적대의식에서 발현된 의심은 더 큰 의심과 우려를 만들어냈으며, 미국이 그러한 의심을 확인시켜주지 못하자 더 큰 의혹으로

13일.

37) “미국의 대조선군사전략적기도를 문함.” 『로동신문』 1999년 1월 19일;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리행을 위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 1999년 2월 11일.

번지게 되었고 심지어 상대방의 진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악순환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재 점화된 북한의 대미 불신은 대북 강압정책을 펼친 부시 행정부 기간에 더욱 고착화되었다.

(2) 제2차 북핵 위기와 대미 불신의 연속

2000년 10월 9일 북한의 2인자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백악관에서의 클린턴-조명록의 회담은 순조로웠고, 그 결과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즉 미국의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가 당선되면서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오콘은 2002년 연두교서에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핵 공격 대상 국가로 지목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체제 위협적인 대북강경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적대감을 더욱 고취시켜 대미강경자세로 전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³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여기에 2002년 11월 13일 부시 정부는 중유 제공 중단을 발표했고, 경수로 제공을 위한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핵 동결 해제 및 NPT에서 탈퇴하면서, 결국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³⁹⁾ 이후 북한이 “조미사이에 불안정한 정전사태가 가까스로 유지되는 조선반도에서 우리보고 먼저 무장해제하라는 것을 강도적론리”⁴⁰⁾라고 비난한 것은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⁴¹⁾ 한편 미국은 2002년 신 국가안보

38) “〈미제의 대조선압살책등은 쓰디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왜 우리를 계속 끌고 드는가.” 『로동신문』 2002년 1월 10일.

39) 사실, 부시 정부가 제기했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장창준,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울: 내일을여는책, 2018, pp. 77-78.

40) “핵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는 그릇된 론리.” 『로동신문』 2004년 7월 27일.

41) “〈미제의 파렴치한 대조선고립압살책등을 당장 견어 치워야 한다〉조미핵합의를 무효화시킨 진범인.” 『로

전략(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우리는 NPT 조약에 엄숙히 서명하고는 조직적으로 이를 파기한 폭군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북 불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부시의 적대적 인식은 2003년 연두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불법정권(outlaw regime)’이자 공포와 굶주림 속에 국민을 지배하는 ‘억압정권(oppressive regime)’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는 악의 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부시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만들었던 성과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상호 비방과 불신 속에서 그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양자 협상의 필요성에 이견을 보였던 배경에서 협상의 방식을 다자 협상으로 전환하고 6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섰다. 북미 양측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되는 「9·19공동선언」, 「2·13합의」, 「10·3합의」 등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성의 없는 태도, 합의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 1차 북핵 위기와 유사한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6자회담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북한은 6자회담이 열리기 전 개최된 3자회담에서 ‘4단계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1차 6자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先) 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2004년 2월 개최된 제2차 회담에서도 미국은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동시병행원칙’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동신문』 2002년 12월 13일.

〈표-1〉 북한이 제시한 4단계 일괄타결안(2003.4)

	대미 요구사항	북한의 약속사항
1단계	중유·식량의 공급	핵계획 포기이사 표명
2단계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	핵시설 동결 및 핵사찰 수용
3단계	미·북/북·일 국교 수립	미사일 시험발사 및 수출 중지
4단계	경수로 완공	핵시설 폐기

출처: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일출판사, 2008, p. 191.

문제는 1, 2차 회담과정에서 미국이 원칙적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⁴²⁾

미국은 제3차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방식을 고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말 바꾸기’에 화가 난 북한은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미국의 북한 ‘때리기’ 및 ‘+α’ 요구는 2005년 ‘9·19공동선언’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합의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즉 9·19공동선언 채택 이후 미국이 BDA 의혹 문제로 북한 자산을 동결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공동성명을 파기하는 한편 2006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1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거쳐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연이어 ‘2·13합의’와 ‘10·3합의’를 채택했다.⁴³⁾ 하지만 이후 회담에서 가장 핵심 쟁점인 시

42) 장달중 외,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111.

43) 제1단계 동결과 폐쇄에 관한 조치를 담은 ‘2·13합의’를 채택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단계 절차

료채취 포함 여부, 확인 대상 등 ‘검증’ 문제가 대두되었고 북미는 다시 대립 국면에 직면한다. 결국 검증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 벌여주기’라는 오점을 남기며 2008년 12월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북미 간 상호 적대감, 의심, 합의 불이행 등 불신의 연속성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나타났다.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가운데에도 2012년 초 북·미 간 3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30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9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합의 2개월 만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합의가 사문화되었다. 더욱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역시 북핵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써 핵전략자산을 한·미 군사훈련에 참여시키며 북한을 위협했다.

이처럼 제1, 2차 북핵 위기는 북·미 간 적대의식에서 발현된 상호 불신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구조화·정형화되면서 북핵 협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동했다. 특히 약속의 불이행은 상호 불신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 상대방에 과한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이슈의 제시 등은 협상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불필요한 행위였다.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았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대미 불신의 현재: 학습효과와 불신의 잔상(殘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 미국은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관계 속에서도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2·13 및 10·3

인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합의인 ‘10·3합의’를 채택했다. Sanger, David E., “Nuclear Pact Broadening, North Korea and U.S. Sa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3, 2007.

합의, 2·29 합의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발언, 전쟁 상황 조성 등 우여곡절이 존재하기도 했다. 상호 불신으로 합의의 틀이 깨어지기를 반복해왔고, 합의한 후에도 잔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상호 의심과 갈등이 증폭되어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 되는 일이 계속되었다.⁴⁴⁾ 분명한 것은 수차례 대화 및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어쩌면 지난 협상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공고화 된 불신과 적대감을 경험하면서 북미 양측에게 ‘학습효과’로 인한 ‘잔상’이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협상이외의 방법들이 갖는 위험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양측의 상반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위성 또한 절대적으로 커야 한다.⁴⁵⁾ 이러한 이유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여전히 인식 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북한이 2018년을 기점으로 대미 유화적 타협전략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기대를 충족 받지 못함으로써 불신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1차 북미정상회담: 불신 속의 신뢰 모색

북미 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 관계가 점차 해소될 기회가 있었다.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했다. 물론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여온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북미 간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자리였다.

44) 김진영,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2013, p. 410.

45) Lebow, R. N., *The art of Bargain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 9~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 과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우려사항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안보-안보 교환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는 신뢰의 원칙을 확인한 자리였다. 즉 양 정상 간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제재 해소, 정전협정의 종결 등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확약에 중점을 두었다.⁴⁶⁾ 사실 미국과 북한은 2017년에만 해도 전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미국과 북한이 과거의 적대와 불신을 뒤로한 채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 으며, 이를 통한 북미 간의 적대관계 종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체제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북한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외연을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다. 미국 또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북한 비핵화 프 로세스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애써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대 관계를 지속해왔던 국가들이다. 신뢰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의 미로 봐야 할 것이다.

46)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현대북한연구』 22권 2호, 2019, p. 173.

(2)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도출 실패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미 양국 간 인식과 셈법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8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미 짐작되고 있었다. 이 회담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했으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북한은 동창리(ICBM 엔진시험장)와 풍계리(핵실험장) 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등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정 부분 이행을 해 나가고 있으나, 미국이 종전선언 교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제재 또한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북한의 미국의 신뢰성 있는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게 선(先)비핵화와 다를 바 없는 조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이다. 북한은 이미 2009년 1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은 근원적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표-2> 북미 비핵화 협상 쟁점

분야	미국	북한
폐기 대상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인력 등 국외 반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국한 자체 폐기
폐기 범위	생물·화학무기, 중·단거리탄도미사일, ICBM, WMD 등 포함 요구 가능성	
이행 방법	선(先) 비핵화 후(後)보상 식 일괄 타결·이행	비핵화·보상 단계별·동시적 교환
검증 방식	임의·불시시찰	신고 장소 대상 제한 사찰

설령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대로 제출할 경우 이는 미국에게 핵 시설 위치 및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되며, 미국의 군사타격 대상 1순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거짓 제출할 경우 미국은 이를 빌미로 북한을 압박해 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일부 핵 시설 폐기 등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한 해법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과 신고·검증 위주의 선(先)비핵화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⁷⁾ 즉 북미 양측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북미 양국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⁴⁸⁾

한편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양측의 확연한 입장 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으로 기대가 컸으나, 결국 노딜(no-deal)로 끝났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민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 α)를 요구하면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해결을 볼 수 없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대북제재를 풀고자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α)적인 핵시설 폐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은 여전히 북미 양측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오해와 인식의 다름(difference) 때문이다.

북한은 회담 이후 가진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

47)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p. 174.

48) 박광득,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18권 제3호, 2018, pp. 9-40; 박광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p. 31.

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언급했다.⁴⁹⁾ 이처럼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은 상호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요구는 상대방의 협상 의지를 의심케 만들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과거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로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식의 차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작은 합의 사항부터 실천에 옮기며, 점차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V. 마치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보여 지는 대미 인식은 불신, 적대감, 비방 등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북한의 대미 인식의 특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불신은 북미 관계 70여 년을 관통하는 주요한 메커니즘(mechanism)이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 '테러지원국' 등으로 공표하면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하면서, 그 갈등은 최고점에 도달했다.

노동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대미관의 주요한 특징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기 북한은 노동신문의 기사보도를 통해 미국과의 적대

49)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9년 3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1006400504?input=1195m>(검색일: 2019.11.10.).

관계를 공고화시키는 한편 통치기반 확립에 적극 활용했다. 즉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수립을 통해 대미 투쟁의식을 확산·강화시켜 나갔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반제국주의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켰다. 이는 대내적으로 체제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한 작동기재로 작용했으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반면 탈냉전 시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대미관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 속에서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즉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상호 불신은 더욱 강화되고 고착화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의 대미 인식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불신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협상에서 미국의 불신을 받은 이유는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핵 포기를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 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군사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응방식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북미 양국은 서로를 믿지 못함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양보 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사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신뢰가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비핵화의 핵심 문제들을 논의한다는 점은 의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까지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선 적이 없었다. 또한 합의 이행도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미 협상은 ‘위기 → 협상 → 합의 → 불

이행(붕괴) → 위기의 심화'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따로 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회복 상황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가거나,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 과정을 끊어내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1차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취해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뢰나 불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신뢰구축 또한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단계적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그에 맞는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9·19공동성명 합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9·19공동성명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게임에서 ‘정책합리성’의 공유를 통한 ‘Give-and-Take’게임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라는 핵심적 이해를 선과 악의 대결적 관점이 아니라 교차승인과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 주고받기 식의 게임으로 풀기로 합의한 것이다.⁵⁰⁾ 상호 불신이 존재하는 북미 양자 사이에서 ‘동시행동 원칙’은 상대방의 합의 이행을 보증 받고 촉구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50) 장달중 외,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p. 24.

참고문헌

-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7.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미제의 조선침략일지』,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2015.
- 김복영-한관중, “남북한 역사 교과서 속의 미국 관련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07.
- 김성학, “북한의 대미 불신의 기원과 내면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한국전쟁, 제네바합의 붕괴를 중심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세라, “북한의 ‘미 제국주의’ 역사 서술 분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2003.
- 김용호, “북한 핵에 대한 인식 이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제18집, 1993.
- 김용현 엮음, 『남북한 군사충돌로 본 분단 70년사』,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 김재용,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韓國史學報』 제37호, 2009.
- 김진영,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2013.
- 박광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7집 1호, 2019.
- _____, “북미정상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18권 제3호, 2018.
- 박영호, “북-미관계의 갈등구조와 신뢰구축의 가능성.” 『신뢰연구』 제12권 2호, 2003.
- 박형준,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세계지역연구논총』 37집 3호, 2019.
- 송경민, “김일성의 대미관 변화에 관한 연구: VICS 기법을 활용한 운영코드 비교분석.” 연세대 통일정치 박사학위논문, 2016.
- 송옥란, “청소년의 신뢰와 불신 의식.” 인하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 _____,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작동방식과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2003.
-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일출판사, 2008.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스쿠트 스나이더 지음, 안진환·이재봉 옮김, 『벼랑 끝 협상: 북한의 외교전쟁』, 서울: 청년정신, 2003.

- 신진, “통합적 협상으로서의 미-북 정상회담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대한정치학회보』 26집 3호, 2018.
- 안문석,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2016.
-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2003.
- 이수석,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의 역할.” 『평화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현대북한연구』 22권 2호, 2019.
- 윤용희, “북한-미국 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3집 2호, 1993.
- 장달중 외,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장원만, “북한의 대미인식과 갈등행태 연구.” 북한대학원대 군사안보 석사학위논문, 2010.
- 장창준,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울: 내일을 여는책, 2018.
- 최윤희, “북한의 대미 인식과 핵 정책: 북한의 대(對)오바마 행정부 초기 인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Lindblom, Charles,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 Pruitt, Dean G., *Negotiation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 Sanger, David E., “Nuclear Pact Broadening, North Korea and U.S. Sa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3, 2007.
-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World Politics*, April 1992.
- Lebow, R. N., *The Art of Bargain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Lewicki, R. J., & B. B. Bunker, “Trust in relationship: A model of development and decline.” In Bunker, B. B., Rubin, J. Z., & Associates eds., *Conflict, Cooperation, and Justice: Essay Inspired by the Work of Morton Deutsch*, San Francisco: Jossey-Bass, 1995.
- Lewicki, R. J., & D. J. McAllister, R. J. Bies,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3, 1998.
- Newton, K.,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Maraffi, M., K. Newton, Jan van Deth, W. Paul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1999.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노동신문』.

Abstract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U.S. Through Rodong-Simnun
: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Hyongjoon Park (Post-doc, Chosun University)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s represented by negative images such as distrust, hostility, and slander. For more than 70 year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aced hostile relations and mutual distrust through military conflicts in the DMZ, mass production of hostility consciousness through various symbolic manipulations and demonization, and the failed nuclear negotiations since the Korean war. The recent North Korea-U.S summit also showed that they do not trust each other's words and actions due to the 'learning effects' derived from their past experiences.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tend to have limitations in grouping the North Korea's perceptions of U.S such as hostility, distrust, slander, and hate into a unified analytical fra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and concretely North Korea's perceptions of U.S, which is an obstacle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between North Korea and U.S.

KeyWord: North Korea, Perception toward U.S., Distrust, Trust, Denuclearization

투고일: 2019년 11월 14일, 심사일: 2019년 12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30일